

# 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에도 'D의 공포' 없다는 한은

공급측 일시적인 요인 기인  
대내외 불확실성 높은 상황  
디플레이션 징후로 단정하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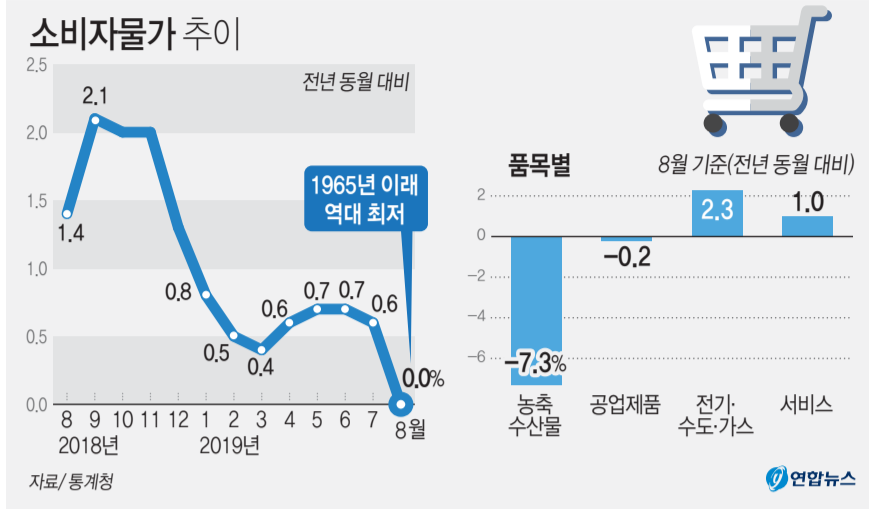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상품·서비스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내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3일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 직후 배포한 '최근 소비자물가 상황 점검'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의 낮은 흐름세가 지속되는 것은 수요 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 측 요인의 물가 하방압력이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월 중 전년 동기 대비 0.5%에 그치며 지난해(1.5%)에 비해 흐름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2015년=100 기준)로 전년 동월(104.85)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식 지수로 0.0%다.

하지만 한은은 당분간 농·축·수산



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후 연말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공급 측 요인과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하는 '관제외 근원물가' 기준으로도 물가 흐름세가 여전히 1%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디플레이션은 총수요 감소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은은 디플레이션을 '통상적으로 물가수준의 하락이 자기실현적 기대 경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한은은 "최근 현상은 물가 하락이 광범위한 확산을 보이지 않고 자기실현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공급 측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상당 부분 가세한 결과"라며 "디플레이션 징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 수의 비중은 여전히 제

한적인 상황인 데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자기실현적 물가하방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면에서의 일시적 요인,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물가 여건뿐 아니라 경기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매우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물가상승률과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한은 "내년 물가 1%대 회복 전망"

거시정책협의회 윤면식 부총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상품·서비스 가격의 전반적 하락) 우려를 일축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급 및 정부정책 측면의 하락요인과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기술(IT)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의 움직임에 있어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단기적인 물가변동요인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한 이를 경제주체들에게 적극 커뮤니케이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립뉴스

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변동성이 큰 공급 측 요인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연말부터는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물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내수 활성화 등 하반기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 "데이터경제 활성화, 범국가적 대책 필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세미나  
법안 마련, 마이데이터산업 제도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가 곧 경제·사회 분야의 적응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시대가 됐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불확실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복잡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시스템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김병욱·인재근·노웅래 의원 등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증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민영 기자

있어서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지에게 위임했던 정보처리권한을 일부 부여받아, 데이터 유통생태계의 행위자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특정 서비스에게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의사 표시하는 권한 행사인 만큼, 개인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여기에 더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처리 후에도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럽의 이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서비스사와 고객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뿐더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용찬 KISDI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은 "데이터 공유·분석 플랫폼을 근간으로 미래 예견적인 국정관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관련 제도와 기관을 설립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신체검사로 담합 대형병원 17곳 적발

공정위 이민·유학 비자발급용  
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 등 담합  
'향후 금지명령' 시정조치 내려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미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신촌·강남세브란스, 한라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해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어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은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발급할 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검사 항목은 결핵, 에이즈, 간염, 성병 검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비자 신체검사는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

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신촌세브란스 등 5개 병원은 캐나다 대사관이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원으로 정하고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으로 올렸다.

여의도 성모 등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 5곳은 2004년 3월 신체검사를 14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함께 올렸다.

한라의료재단 등 11개 중국 지정 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올리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향후 이같은 담합을 하지 않게 하는 시정 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